

# 전남도-도의회, 茶산업 등 입법 조례안 갈등

박준영 지사, “특혜·차별” 공포 보류

도의회 “재의 요구땐 세밀히 살펴볼 것”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의원 입법 조례안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의원들이 밸의해 통과된 조례안을 박준영 전남지사가 공포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조만간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21일 폐회한 제248회 임시회에서 전남도 차(茶)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와 전남도 공동주택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등 3건을 의결했다.

또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시 의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전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도 개정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의결과 집행부 이송 이후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공포되지 않고 있다. 박 지사는 특혜성 등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차산업 발전 조례는 일반 농작물을 포함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 품목을 지원하는 조례는 일종의 특혜라며 거부의사를 피력했다. 여기에 지원 대상도 막연하게 차산업으로 해 혼란스러운 점도 한몫했다.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공동주택내 놀이시설 지원 조례도 놀이터 80% 이상이 시(市) 지역에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군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 놀이시설 지원 사업이 시군의 역할인데다 연간 10억원 이상되는 사업비 조달도 부담이다.

복포와 여수 등 5개 시지역 공동주택 놀이시설은 전체 898곳 중 81%인 731곳에 달하며 나머지 17개 군지역은 167곳(19%)에 불과하고 특히 신안군은 한 곳도 없다.

전남개발공사 조례도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사전정보유출 우려,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남개발공사가 반대한 바 있으나 원안 통과됐다.

한편 이들 조례는 도의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수정 없이 통과됐다.

전남도는 오는 14일까지 차산업과 전남개발공사 조례에 대해 재의 여부를 결정, 도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는 집행부 재의 요구시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개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부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의 요구는 단체장이 의원입법의에 대한 유일한 경제수단으로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다”며 “관련 실과에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윤현석 운영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가 오면 다시 한번 세밀히 살피 뒤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투표 독려 현수막

아무데나 못 건다

특정 후보 지지와 무관한 투표 독려 현수막 설치가 들어나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안전행정부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전국의 선거출마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무단하고 설치하고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지침을 자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을 보면 투표 참여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도로분리대에는 투표 참여 현수막을 걸 수 없다.

안행부는 또 옥외광고물 위반 사실을 모르고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 홍보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北 무인기 도발 대응 방안

작전계획·예규 반영 검토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작전계획과 작전예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9일 “한미연합사와 합참의 작전계획과 작전예규에 있는 북한의 도발 유형 중 무인기를 이용한 도발 대비책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무인기도 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짜게와 예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 당 조직 문제 등 중요 안건을 결정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전했다.

/연합뉴스

## 北,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재추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회의

전했다.

북한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김 제1위원장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했었다.

이 때에는 김 제1위원장장을 재추대한 것은

“그 어떤 전지증과가 닥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단결의 유일 중심, 영도의 유일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의지를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 구성된 제13기 최고인민회의는 만수대의사당에서 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 내각 등 국가기구를 정비하고 예산·결산 등의 안건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해 김정은 제1위원장장을 처음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의지를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15P - 13층

- 실평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 매매가 - 3천2백만원

29P - 사무실 적합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전체 올수리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2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500만원

## (주)오천경매

대표, (062)525-5000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주1회 3개월 완성
- 1대1 개인지도
- 배우면서 투자 가능
- (단독/공동투자)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 근저당으로 보장
-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 연 사용료 1200만원
- 매수 신청 대리!
- 원하는 물건을
- 최소비용으로 처리

남/직원 모집

경매 배우면서 일하실 분

남: 35세 이하, 운전 및 기타

여: 25세 이하, 경리 및 기타

근무조건 / 급여는 상담후 결정합니다.

알기쉬운 선거법



(8) 광주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선관위 신고후 지급 가능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및 실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선거사무 관계자=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과 선거 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가 있다. 이를

고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선임하는 등 후보자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 밖의 선거사무 관계자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외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선거사무 관계자 선임=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장 1인과 선거사무원을 포함한 선거사무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5명, 구·시·군의장 선거 3명, 지방의원 선거는 2명 이내에서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체 선임 수는 최초 선임을 포함해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면 반드시 선거사무장을 선임해야 한다.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선거사무원 선임 수에는 포함된다.

한편,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명 이상의 예비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 관계자로 선임할 수 없다.

◇활동범위=선거사무장은 각종 신

고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선거사무 관계자를 선임하는 등 후보자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 밖의 선거사무 관계자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외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수당 및 실비 지급=예비후보자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하면, 제공하는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수당도 선거의 종류와 신분별로 차이가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5만원, 선거사무장은 7만원, 구·시·군의장과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사무장은 5만원,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은 5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에게는 소속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